九州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Kyushu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1970년대 새로운 경제담의 대두

박태균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 객원교수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https://doi.org/10.15017/2198466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6, pp.61-77, 2006-03-15.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KYUSHU UNIVERSITY

1970년대 새로운 경제담론의 대두

박태균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머리말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상황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정치적으로 유신체제는 인적 물적인 기반을 제3공화국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체제 면에서 이전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말까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인정되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표면적으로나마 법치주의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신체제와 신군부의 강권통치로 규정될 수 있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정치체제는 1960년대까지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특히 해방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였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1970년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변화의 욕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부터 사회적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억압의 강도가 강해졌고, 획일화된 문화가 강요되었다. 또한 다양한 서구문화의 유입 속에서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주한미군과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서구문화의 유입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 시작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유신체제와 신군부에 의해 국수적인 민족주의의 형태로서 새로운 한국식 사회문화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양상은 경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195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열정은 1962년 이후 2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표출되었다. 여기에는 1950-60년대를 통해 진행된 경제개발론과 관련된 지식인들의 논의가 녹아 있었다. 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의 담론은 1950-60년대를 풍미한 가장 중요한 경제개발과 관련된 담론이었고, 이러한 논의 속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이루어졌다.(1) 부분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1970년대의 경제개발론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수출입국론'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의 정치, 안보, 경제적인 위기는 새로운 경제담론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안정화 정책"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두 번에 걸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직후에는 부실기업 정리와 8.3조치, 그리고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경제안정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면서 수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었으며, 한국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번의 전환기를 고려하면서 1970년대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담론의 주체들의 성격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1970년대에 경제이론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간 경제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전개했던 논의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쟁은 1979년을 기점으로 하여 실행된 '경제안정화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새로운 경제정책 담론 주체의 형성

1) 전문 경제관료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대체로 식민지 시기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경제부처에서 일했던 관료들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자들과 『사상계』와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등 잡지와 신문에 경제정책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던 지식인들이었다.(3) 이들은 신문과 잡지에 대한 기고를 통해서 경제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이끌었고, 이승만 정부 하에서 부흥부와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 장면 정부 하에서 건설부와 국토건설단, 군사정부 하에서 경제기획원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5.16 쿠데타 이후에는 박정희의 경제고문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조율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1950년대 이후 성장한 관료들과 미국에서의 유학을 거친 교수들이 경제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재무부에서 활동했던 김정렴의 상공부 장관에 이은 대통령 비서관 발탁, 김학렬의 경제부총리 임명 등은 경제관료의 전성기 시대를 열었다.(4) 송인상, 김현철, 신현확 등을 제외하고는 최호진, 박희범, 최문환 등 경제학자들이 담론을 이끌어가던 시대에서 실무에 능한 경제관료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영의 경우에도 한국일보를 창간하기 이전에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장기영, 김정렴, 김학렬 등의 밑에서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경제관료들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중요한 요직을 거쳤고,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면서 성장하였다. 장기영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있을 당시(속칭 KY 시대, 1964년 5월부터 1967년 10월까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경제관료들로 장예준, 정재석, 우용해, 김태동, 이경식, 이희일 등이 있다.(5)

김재익, 이기욱, 김찬진, 조정제, 서석준, 강경식, 강봉균(행정고시 6회), 전윤철, 한이헌(행정고시 7회), 장승우(행정고시 7회), 임창열(행정고시 7회), 진념 등도 역시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성장한 관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후술할 신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관료들로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익숙한 KY 시대의 관료들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6)

이들 경제관료들은 주로 1970년대를 통해 경제정책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관료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 단기 연수를 다녀온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전문관료들이 경제정책의 실무에 능했으면서도 특별한 공통적 경향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장 유능한 관료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던 김재익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유학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성향의 경제정책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실무에 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그러나 단기연수나 유학을 통해서 후술할 신고전주의적 경제학을 접했으며, 그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1980년대 이후 경제관련 부처장을 맡고 있을 때 잘 드러났다.

2) 신고전주의적 경향의 학자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외국, 특히 미국에 유학한 사람들이 귀국한 이후 주로 대학의 경제학과에 자리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식 경제학이 주류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미시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량경제학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노동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학자들이 경제개발론을 중심으로 거대담론에 매달렸다면, 이들은 특정 분

야의 전문가였다. 당시 학계의 한편에서 케인즈와 후케인즈가 주목을 받고 있었다면 이들은 신고전파적인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경제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출발은 소위 '서강학파'로 시작되었다. 서강대의 김만제 교수[8]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원장으로 10년을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승윤,[9] 남덕우,[10] 김병국 등이 모두 서강대학 교수 출신으로 196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65년 서강학파는 경제기획원 및 USOM 당국과의 용역 계약 아래 "통화량결정요인과 금융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경제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화폐론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11] 이들이 하나의 '파'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의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12]

서강학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경제정책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1960년대말까지 나온 경제학자들의 글들은 대체로 거시 경제학의 측면에서 거대 담론들을 다루고 있었다. 경제성장에서의 구조의 문제, 성장모형의 문제, 그리고 자본과 저축률의 문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된 주제들이었다. 그러나 서강학파들은 '투자순환과 내자동원'(1968), '한국경제의 성장모형'(1969. 10) 등 거시적인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였지만, '국책은행 경영합리화 연구보고서'(1967), '수출능력의 예측과 수출증대방안'(1968. 9), '자금순환계정에 의한 부문별 자금공급 "루트" 및 자금흐름의 예측'(1969. 12), 'A Study of Money Market and Industrial Investment Financing in Korea'(1971), '국영기업체에 대한 정부감독제도에 관한 연구'(1973) 등 금융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책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6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던 한국정부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서강학파'가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KDI에서의 역할이다. KDI는 USAID의 지원 하에서 경제정책의 현안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1년 설립되었다. KDI의 초대 원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김만제는 외국에서 유학한 경제학 박사들을 파격적인 대우로 대거 등용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KDI에서 대학으로 옮겼지만, 경제부처로 자리를 옮겨 경제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김광석(경희대), 황병태(외국어대), 김완순(고려대), 이학용(고려대), 문팔용(건국대), 홍원탁(서울대), 이천표(서울대), 노부호(중앙대), 송병락(서울대), 김영봉(중앙대), 서석태(연세대), 남종현(고려대), 김선웅(한양대), 이성휘(서울대), 김동현(성균관대), 이성순(성균관대), 구성렬(연세대), 임호규(인하대), 박세일(서울대) 등이 KDI에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이다. 김대영(기획원), 문희상(국무총리실), 김윤형(동력자원부) 등은 경제관료로 자리를 옮긴 경우이다. 특히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원들은 이후 경제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직간접적으로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사회 구조에 주목한 경제학자 그룹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 유학은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경제 담론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은 주로 국내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계속해서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소위 '제도학파'로 불리우면서 경제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구조 문제에 주목하였다. 즉, 경제를 분석하거나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물론 이들이 미국 경제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주로 안식년 기간을 통해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이론을 비판적으로 국내에 소개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변형윤과 박현채, 그리고 조순이다. 변형윤과 박현채가 경제개발을 구조개혁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면, 조순은 195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케인즈(J.M. Keynes)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신고전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변형윤은 최문환과 박희범, 신태환 등이 주도하였던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개발론의 맥을 이어간 거의 유일한 경제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변형윤이 이러한 입장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면,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왼쪽에 위치하였다. 변형윤은 박희범, 박현채와 함께 로스토우의 이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학자였다.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고,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을 전공하였지만, 변형윤은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중요시했다. 특히 그는 성장보다는 균형과 분배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적 경향의 경제학자들과는 그 견해를 달리하였다.(13)

그는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경제성장의 시기를 통해 계속되어 온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하였다.(14) 그의 글에서는 알프레드 마샬(A. Marshall)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박희범과 최문환의 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변형윤의 입장은 1980년대까지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1980년 이후 그는 4년 동안 해직교수를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제자들(소위 '학현사단', 학현은 변형윤의 호)이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15)

박현채는 사회주의적 경향의 경제개발론의 맥을 잇고 있다. "민족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이론은 '정치경제학의 문제틀에 국민경제의 유형인식을 접목하여 민중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내포적 국민경제발전론을 주장'하였고, '대안적 근대화프로젝트 또는 민중적 민족주의의 길'을 제시하면서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별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6)

비록 그의 입장이 초기에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민족경제론'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회운동적 입장의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글에서는 일관적으로 '식민지적 구조'의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자주적' 민족경제의 확립, 농업의 발전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토지보유 상한선 폐지가 논의되고 있었던 1970년대 후반에는 토지공개념을 대안으로서 제기하기도 하였다.(17)

변형윤과 박현채는 수출주도형 또는 해외의존형 경제개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만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18) 그러나 전자가 제도권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추구한 반면, 후자는 지배 담론에 대한 대안을 사회운동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조순은 경제문제를 사회 전체적인 분석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두 학자와 공통점을 갖지만, 서구의 경제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로 학계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변형윤보다 2년 먼저 서울대학 상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1967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의 학문적인 연구와 활동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그는 케인즈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한 축을 형성하였다.(19) 또한 조순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경제학과의 연구진들은 경제연구소와 『경제논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순은 케인즈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20) 신고전주의로 대변되는 현대경제학을 비판하였다.(21) 그는 현대경

제학이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일쇼크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분배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등 광범위한 부문'의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22)

이상과 같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 주목한 경제학자들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미국 외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제학적 연구들을 흡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과 이들의 주위에 있었던 경제학자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에서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경제학 이론을 흡수하거나 일본 경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시기에 기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에 익숙했던 이들 그룹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23)

3. 경제담론의 계승과 변화

1) 균형성장론의 계승

1960년대까지 경제개발의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그리고 로스토우의 이론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균형성장론은 한국과 같이 식민지 상황을 거친 국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이론이었다. 학문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떠나서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자립은 대부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균형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24) 이론적인 비판과는 달리 지식인들에게 균형성장론은 하나의 대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수출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이 한국사회의 경제개발전략으로서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곧 수출입국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균형성장론적인 인식은 이 시기 경제정책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우선 이론적으로 볼 때 로스토우의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로스토우(W.W. Rostow)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범과 변형윤은 그의 이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25) 이들은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5.16 쿠데타 직후에 주장했다가 실패했던 내포적 공업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26)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한편에서는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업 부문의 강조로 나타났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경제개발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중요한 담론이었다. 공업화에 모든 경제정책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197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농업에 대한 관심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주장하고 있었던 변형윤과 박현채, 김진균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농업의 발전에 기반하지 않은 공업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27) 또한 케인즈적인 경제정책을 선호하고 있었던 조순과 내포적 공업화론을 주장했던 박희범 역시 농업발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28)

농업과 2차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1970년대 말에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었다. 대체로 신고전주의적 입장을 가진 지식인이나 관료들이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안정화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긴축예산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안으로 이중곡가제의 폐지, 양곡 및 비료계정의 운용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29) 국내파 경제학자들은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균형성장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케인지안들의 논의이다. 박현채와 변형윤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면서 균형발전론을 주장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전주의적 입론과 갈등을 빚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케인지안들의 경우 신고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경제 중심의 자유화를 주장하면서도 농업의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자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입장은 1979년 말에 제출된『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조순, 경제과학심의회의)에 잘 나타나고 있다.(30)

지금까지의 불균형성장을 균형성장으로 고쳐야 한다. 농업에 대한 보호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속됨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는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iii쪽)

이 글에서는 균형성장을 통한 내연적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농업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외자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외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외자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내자 동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었는데,(31) 외자에 대한 경계와 비판은 1960년대 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더욱 부각되었다. 많은 경제관련 글들은 차관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그 초점은 맞추었으며,(32)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33) 따라서 경제정책을 질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으며, 내자동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자를 도입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34)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역시 외자의 이용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1960년대 후반의 비판과는 다르다. 1960년대 후반의 비판이 내자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는 외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외자의 한계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iv 쪽)

분배의 문제는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균형성장론이나 한국 경제의 모순구조와 관련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중요한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민족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데 반하여 이미 1970년대 후반 이후 계급문제와 분배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60년대에는 쪼갤 수 있을 정도의 파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거대한 파이를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시기는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쪼갤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신고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분배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쿠즈네츠의 이론이었다.

쿠즈네츠는 선진국의 예를 통해서 일정한 성장의 단계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분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35) 이 이론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아델만 (I. Adelman)에 의해서 한국 상황에 적용되었고, 세계은행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분배문제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서상철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여사가 채택함으로써 무의미한 것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36)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역시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쿠즈네츠의 이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즉, 적극적으로 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

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37)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8)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배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10. 소득분배의 형평은 근래 매우 중요한 정책상의 문제로 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자연히 소득분배의 형평화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소득의 형평적 분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인플레의 수속, 은행의 편중대출의 지양, 적절한 이자율 정책 등은 모두 소득분배의 형평을 도울 것이다. 조세제도의 역진적 측면을 고쳐야 하며, 정부지출도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

14. 복지증진에 대한 정부의 기본구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서구의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하나씩 도입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아니된다. 80년대 초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합목적적, 예방적 성격을 띠어야 하다. 내연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저축성향을 드높이며, 사회심리의 조화 및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소득분배의 형평, 근로자의 권익보장, 공해의 방지, 환경의 보존, 주택공급의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펴는 것이 곧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분배에 대한 입장은 미르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르달(K.G. Myrdal)은 1944년 「미국의 딜레마 : 흑인문제와 현대민주주의 *An American Dilemma :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를 쓴 이후 제3세계의 빈곤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빈곤이 빈곤을 낳는다는 누적과정이론을 주창하였다. 이미 미르달의 이론은 1950-60년대를 통해 최문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지만, 1977년 서울대학교 경제논집을 통해서 미르달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39) 그의 이론을 통해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다.(40)

이상과 같은 균형성장론은 1950년대 넉시(R. Nurkse)에 의해 주장되었던 균형성장론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면 농업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복지정책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균형성장론에 비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안정 시책을 둘러싼 논의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의 과정, 수출입국론의 확산, 1970년대 이후 100억불 수출, 1인당 GNP 1,000불 달성, 중화학공업화 등 외형적 성장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장'은 하나의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명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방전이 나올 뿐이었다.

물론 성장의 과정에서 '안정'의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50년대 중반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었고,(41) 1960년대 중후반에도 또 한 차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42) 또한 1960년대 말의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43) 대체로 1974년까지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는 물가안정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미가 정책의 추진을 찬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논리적인 틀을 갖춘 '안정'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44)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하루 아침에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1972년 8월 5일 물가 동결을 발표하였지만,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서 1974년 2월 공공요금을 최고 109.3%까지 인상하였고, 세탁비누, 설탕 등 생필품 가격 역시 7.2%에서 57%까지 인상하였다. 곧이어 2월 6일 경제기획원에서 종합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보름이 지나지 않아 TV, 냉장고, 승용차 등 15개 공산품 값을 다시 12-54.4% 인상하였다. 동년 5월에는 쌀값과 농약값이 인상되었고, 6월 31일에는 설탕이 다시 49.6% 인상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하여 석유류와 전기료를 각각 31.3%, 42.4% 인상하였다.

제1차 석유파동을 겪은 한국정부는 1975년 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가의 행정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물가안정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이나 통화팽창의 문제점을 해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는 1973년의 예-당시 소비자 물가증가율이 3.2%밖에 되지 않았다.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가압력을 단순히 잠재화시키는 것이었다. 1973년의 물가안정은 1974년의 42.1%에 이르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가져왔고, 1975년 이후 1978년에 이르기까지 물가안정 및 건설 및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경기과열은 동 기간 중 거의 모든 물자에 있어서 이중가격의 형성과 '프레미엄의 시대'를 야기하였다.

이에 1978년부터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12월 20일 재무부는 연료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정부 내에서는『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책』(경제기획원, 1978년 3월),『한국경제의 과제』(경제 제1수석 비서관, 1978년 4월),『통화안정을 위한 당면 재정금융정책』(경제기획원, 1978년 4월),『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책』(경제기획원, 1978년 12월) 등의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9년에 가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1979년 4월 17일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동년 3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 경제 제1수석 비서관,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경제과학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우리의 당면과제와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성장에 주력했던 남덕우 경제기획원 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79년에 들어와 신현확이 새로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나온 것이다. 당시 국내 여론은 새로운 진용의 경제기획원이 성장보다는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어주기를 원하고 있었고,(45) '경제안정화 종합시책'과 함께 논의의 배경이 되었던 경제과학심의위원회의『우리의 당면과제와 대책』(이하 '『대책』' 으로 약칭)과 한국개발연구원의『안정화 대책 방향』(이하 '『대책 방향』으로 약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1970년대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새로운 경제전문가 그룹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당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대책』과『대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책』과『대책 방향』은 큰 틀에서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나 그 대책과 관련해서 일정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후자는 자유시장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대책』의 경우 전술한『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와 일정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하

〈표 1〉『대책』과『대책 방향』의 비교

	『대책』	『대책 방향』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산업자본 동원체제의 낙후성(통화팽창을 통한 동원)	과거 누적된 가격상승 요인의 현실화 경제전반의 불공정 거래
기업의 문제	소비재 생산의 중심이 중소기업에 산업자금이 부족	정책 금융. 실질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물가통제	해제하여야 함. 적정가격은 기업에 이윤보장, 공급의 원활화. 수입의 촉진.	해제
근본대책	1. 자금순환 구조개혁-금리인상만으로는 안됨. 사채 시장의 제도권 흡수가 필요. 부동산 투기 억제 2. 중소 내수산업에 대한 지원 3. 소비촉진적 TV 광고 억제	1. 누적화된 가격의 현실화 2.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자의 도입 3. 불공정 거래 개선
금리 현실화	18.5%에서 22%로 인상. 각종 정책 금리도 인상.	금리의 현실화 필요.
중장기 대책	1. 부가가치세 포함 전반적 세제개편 2. 금융산업의 개편 3. 노사협동의 증진 4. 토지제도의 개선	언급 없음.

* 1981년에 간행된『경제안정화시책 자료집』내에 있는 자료를 이용.

지만,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과 개입해야 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은 공정경쟁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에서부터 분배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 각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전면적 세제개편이나 금융산업의 개편, 노사협동의 증진, 토지제도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은 대체로 이러한『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대책 방향』은 자유화의 방향과 함께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결국 1980년대 초에 실행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 시책은 대체로 재정의 안정, 금융의 긴축, 투자의 조정, 수입의 촉진, 경쟁의 촉진, 가격의 현실화, 금융의 자율화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 초반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고전주의적 입론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대책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10.26 사건 등의 사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곧바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1980년대 초 이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신고전주의적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으며, 이 점은『경제안정화시책 자료집』, 그리고 5공화국의 대통령 경제담당 수석보좌관이었던 김재익의 활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3)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

미국의 신고전주의적 경제학의 영향은 1970년대 이후 경제담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각론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상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러한 변화는 시장기능의 순기능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역할 축소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을 막는 대책을 정부의 가격에 대한 통제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부 재정의 조절, 수입자유화, 공정거래를 통한 자유경쟁체제의 확립 등을 통해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대책』과『대책 방향』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구조에의 개입과 금융체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 그리고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통상적 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1978년 이후 점차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진전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수입자유화의 추진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수입자유화는 보호무역의 장벽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자유를 통한 공급의 확대, 그리고 국내 가격의 해외 가격과의 조응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1978년 5월 1일과 9월 18일, 그리고 1979년 1월 1일 등 3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도 수입자유화 조치가 더욱 확대되었고,(46) 이것은 경제자유화를 통한 안정의 논리와 연결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농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47) 또한 198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48)

결과적으로 1980년대의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정부주도에서 유도계획방식으로 전환한 것 역시 민간주도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49) 1980년대에 들어서 안정화 정책에 가장 중요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제시되었던 것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안정화 정책의 실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이론과 관련하여 그의 경제사상은 신고전주의적 이론에 충실한 것이었다'는 평가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0)

그러나 경제학자, 경제관료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공감대가 이런 측면에서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대책』과 『대책 방향』에서의 차이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강한 경제학자와 관료들은 시장의 역할에 강한 신뢰를 보이면서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역할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부문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더라도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점진적 자유화'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중심적 사고는 주로 서강학파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최신 경제학이 도입하면서 경제학을 사회구조적인 측면, 또는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학파적인 한국 경제학의 전통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끊임없이 양산되는 미국 유학파들을 통하여 재생산되었다. 이들의 이론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왜곡되었던 자본주의가 다시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경제가 중심이 되는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하여 시장기능에 발전전망을 맡겨야 하며, 특정 산업부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은 프리드만(M. Friedman)의 통화주의였다.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개발과 관련해서는 1950년대에 경제개발론과 관련하여 출판된 책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었다.(51) 프리드만의 이론은 1970년을 전후하여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52) 그의 주장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주장했던 케인즈의 이론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프리드만의 이론은 금융자유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에도 일조하였다.(53) 금융시장의 개편을 위한 필요성은 서강대학 교수였던 이승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그는 금리의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공사채 시장

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54) 또한 김병국은 외자도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필연이 되어 버렸으며, 외자의 성공적인 도입은 안정기조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55)

금융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가 추진되었고, 1983년 사금융으로서 한미은행이 문을 열었다. 또한 프리드만 이론의 도입은 다른 한편으로 재정학에 대한 논의의 확대에도 기여했다.(56) 물론 이러한 정책이 완전한 금융자유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정문제에 관한한 1976년까지도 힉스(J.R. Hicks)나 해롯도마르(Harrod Domar) 모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57) 프리드만의 이론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보다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프리드만의 이론과 화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경제학 전문가들의 관심사였다.(58)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시장' 중심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점진적 자유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하여 케인즈 이론 또는 수정된 이론을 통해서 경제정책이 실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수입자유화를 우려하였고(59) 금융의 완전한 자유화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60)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융자방향과 관련한 간접적인 유도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관리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1)

'시장' 중심적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시 케인즈의 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출간된 경제논집에는 케인즈에 대한 해석, 재해석이 줄을 이었으며, 신고전경제학의 범람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62) 이미 1975년 신고전주의가 현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던(63) 조순은 케인즈의 이론이야 말로 현실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현실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이론이며, 그의 경제학은 경제학이 공론을 떠나서 현실세계로 돌아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64) 1983년에는 또 한번 케인즈를 재조명하는 특집호가 발간되었다.(65)

이들 두 경향 사이에서의 첫 번째 조우는 1970년대 초반의 8.3 조치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이었다. 8.3 조치는 사채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사채로 인하여 부실해진 대기업들을 살리는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점은 대기업의 사주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던 '위장사채'의 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는 대환파와 동결파로 나뉘었다. 대환파의 남덕우와 천병규, 주원은 대기업의 회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장사채를 출자전환하자고 주장하였고, 동결파는 사채 전체를 동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결론은 사채 전체를 동결하는 방안으로 나갔지만, 대기업 사주의 위장사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동시에 채택되었다.(66)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기업의 역할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일정정도 채택된 것은 사실이지만, 8.3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웬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67)

1970년대 후반 경제안정화시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이들 사이의 대립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 개입의 정도에서 나타난다. '시장' 중심적 입장에서는 경제구조에서 정부의 역할이 최대한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개입이 아니라 감시의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점진적 자유화'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치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운용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 내지 감시자로서의 기능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촉진에 저해되는 각종의 법적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68)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책금융의 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금융정책의 수행에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간은행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되어야 한다.(69)

'시장' 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의 자유화는 전체적인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전환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정부는 그 역할이 축소화되더라도 분배와 복지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정화 시책의 후속조처로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의『금융제도개편방안』이 금리의 전면적인 현실화를 주장한 반면, 경제과학심의위원회에서 나온『금융산업의 개발방안』이 전면적 금리자율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채거래의 양성화를 주장한 점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주도라는 것이 당시까지 혜택을 입고 있었던 재벌이나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70)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시장' 중심적 경향이 주로 자유화를 통해서 시장기능이 회복되면 왜곡된 경제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진적 자유화'의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시장기능의 회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알파'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 점은 이들이 당시의 시장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 시장 조건 개선을 위한 방향을 금융정상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건전한 기업가적인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중심적 입장에서는 1970년대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졸 초임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함으로써 고급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71) 이러한 인식은 곧 1980년대 초 대학정원의 급격한 확대로 이어졌다.

반면 후자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건전한 정신적 사고이다. 즉, 슘페터적인 사고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연적 성장을 위하여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은 기술과 지식의 증진이므로 교육과 인적자본의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 저축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업의 본연의 임무인 이노베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제도와 운영방법을 고쳐야 한다. ...
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결국 경제주체의 정신적 바탕의 건전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계, 기업, 정부의 3대경제주체의 사고와 관행이 아직 근대적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건전한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건전한 윤리관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하고 기업도 건전한 윤리관에 입각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단순한 몇 개의 정책변수, 이를테면 통화량, 수출액, 조세부담률 등의 조작에 시종하여서는 안되며, 건전한 양식과 사회의 앞날에 대한 통찰력에 입각하여 국민을 설득, 계도하는 차원높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시장' 중심적인 사고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여기까지는 '시장' 중심적 사고가

〈표 2〉 '시장' 중심적 그룹과 '점진적 자유화' 그룹의 차이점

	'시장' 중심 그룹	'시장' 중심 반대 그룹
정부의 역할	최소화. 개입에서 감시자 역할로 민간주도로	단계적 축소 성급한 민간주도는 불가
노동시장 및 분배의 문제	전문 노동인력 공급의 확대를 통한 임금인상의 억제	분배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 노사협조의 필요성
재벌 및 대기업 대책	공정거래제도의 추진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 공정거래 제도가 대기업에 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
금리자율화	전며적인 금리 자율화의 필요성	단계적인 금리 자율화 정책 금융권의 문제는 사채시장, 어음시장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함.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를 통해 계속되었던 '박정희의 방식'이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압도하고 있었다.(72) 그러나 '박정희의 방식'에 일정한 차단효과를 나타낸 것은 IMF의 권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에 내한한 IMF 조사단의 보고서는 '시장' 중심적 사고가 정책화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IMF 조사단은 1979년 연례보고를 통해 "보호무역"이 전세계 경제침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일침을 놓았던(73) IMF의 조사단은 5.18 사건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1980년 5월 22일 협의단을 파견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하였다.(74)

특히 이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에 대한 권고였다. IMF의 권고는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핵심에는 은행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 의한 특혜대출은 모든 기업에게 고르게 자금의 혜택이 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KDI의 '시장' 중심적인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IMF의 권고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의 자료, 한국정부의-자료, 그리고 관계자들의 증언이 필요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1981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시장' 중심적 해결방식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 결과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전면에 이승윤, 김재익 등 신고전주의적 성향의 학자, 관료들이 전면배치 되었고, 이들이 스스로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경제안정화시책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신고전주의적 경향에 근거한 '시장' 중심적 사고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담론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시장' 중심적 그룹과 '점진적 자유화' 그룹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윤, 박현채 등의 대항담론이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 '시장' 중심적 경향이 이론대로 그대로 정책화될 수 없었다. 소위 '서강학파'나 KDI 출신의 경제학자 및 경제관료들이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현실은 국가의 개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실적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1970년대 '박정희 방식'이 경제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1980년을 전후한 경제위기 등은 경제 자유화의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소위 '장영자 사

건' 이후 추진되었던 금융자유화 정책 및 금융실명제 정책이 햇볕을 보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시장' 중심적 정책은 1990년을 전후하여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1997년의 IMF 위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철퇴를 맞는다. 1997년 이후 IMF는 '시장' 중심적 경제정책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변형윤과 박현채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제사상사와 관련된 논의가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분석하는 서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개발론과 관련된 논의 역시 그 내용이 서구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시장' 중심적 사고의 확산 과정 역시 서구의 경제학 이론을 그대로 대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에서 경제사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본고에서 편의상 '시장' 중심의 그룹과 '점진적 자유화'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75)

참고문헌

송희영,「물가에 쩔쩔매는 대학자: 조순」,『월간조선』, 1989년 8월호
유정현,「신현확 전 국무총리: 성장 뒤에 복지 다라야 한다」,『월간조선』, 1990년 7월호
이홍,「장관의 잦은 교체와 정책 일관성의 붕괴」,『월간조선』, 1992년 1월호
오효진,「대쪽교수 변형윤」,『월간조선』, 1987년 7월호
홍희영,「경제팀과 비경제팀, 누가 이기나」,『월간조선』1985년 8월호
대담,「전환기 경제정책의 경륜(서석준, 김성두)」,『월간조선』1983년 9월호
「제5공화국의 권력엘리트들」,『신동아』, 1983년 10월호
최성범,「이경식 부총리의 파워」,『신동아』1993년 10월호
신상민,「새 경제총수 김만제 연구」,『신동아』1986년 3월호
허승호,「경제관료의 맏형, 경제기획원 엘리트」,『신동아』별책부록, 1994년 1월호
홍권희,「인재의 보고: 재무부의 엘리트」,『신동아』1994년 1월호
박영균,「정재석(기획원장관), 박재윤(대통령 경제수석) 누가 실세인가」,『신동아』1994년 2월호
김대호,「경제사령관 박재윤 연구」,『신동아』, 1993년 5월호
신태환「전 서울대총장의 회고, 나의 경제학 수업」,『신동아』1993년 6월호
변형윤,「마르크스를 넘어서: 마르크스 사후 100년, 슘페터, 케인즈 탄생 100년」,『신동아』1983년 3월호
정정길,「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 2: 전두환」,『신동아』1992년 10월호
정정길,「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 3: 노태우」,『신동아』1992년 11월호
김의균,「한국의 경제학 엘리트들」,『신동아』1984년 5월호
배인준,「재계의 관료, 군 출신들」,『신동아』1986년 8월호
민병문,「신동아 인터뷰: 조순: 지금은 기득계층의 개혁의식 필요한 때」,『신동아』1989년 5월호
배인준,「이승윤 경제팀: 인맥과 정책」,『신동아』1990년 6월호
주석균,「외곡도입에 항의한다」『사상계』1958년 4월호
주석균,「신년도 식량정책에 대한 비판-糧政에 대한 사상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사상계』1958년 11월호
황병준,「한국중소기업의 고민」,『사상계』1961년 6월호
오원철, 오원철,『한국형 경제건설 7: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김정렴,『아, 박정희』, 중앙 M&B, 1997

(1) 졸고,「1950년대 경제개발론 연구」,『사회와역사』21호, 2002 참조. 균형성장론의 담론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그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비판받기 시작하였으며, 불균형성장론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홍성유,「발전이론과 농공병진정책」,『정경연구』, 1966년 9월호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로잔슈타인 로단(Rosanstein-Rodan)의 빅 푸시(Big Push) 이론과 허쉬만(O.A. Hirschman)의 불균형성장론, 그리고 로스토우의 도약이론(take-off) 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1950년대와 1960년대 안정과 성장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사상계』1957년 7월호에 게재된 ?물가안정과 실업대책-나의

구체적 방안과 논리적 근거」 참조.

(3) 박태균,「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0 제2장 참조.

(4) 김학렬은 재무부장관,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서 1969년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경제위기의 시기에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서 있었으며, 당시 박정희의 경제가정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1970년대 경제정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5) 경제관료 중에는 은행을 통해서 성장한 관리들도 있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이경식이나 김명호, 나웅배, 신병현 등이 모두 한국은행에 입사하였지만, 이후 경제기획원으로 옮겨 경제관료로 성장하였다.

(6) 박병윤 외,「특별리포트: 한국경제의 브레인들」,『세대』, 1977년 5월호

(7) 남덕우 외,『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 20주기 추모 기념집』, 삼성경제연구소, 2003 참조.

(8) 1958년 미 덴버대 경제학과 졸업, 1959년 미주리대 대학원 졸업, 1964년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1965-70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971-82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975-1983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982년 서강대학교수, 1983년 한미은행장, 재무장관, 1986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9)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 수료, 1955년 콜로라도주립 애덤즈대 수학, 1957년 미주리대학 대학원 졸업, 1960년 위스콘신대학 경제학 박사, 1961-1964년 서울대 상대교수, 1964-1976년 서강대학교 교수, 1969년 농림부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971-1976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973년 KDI 연구자문위원, 1976-1980년 유정회 의원, 1980-1982년 재무장관

(10) 1950년 국민대 정치학과 졸업, 1956년 서울대 대학원 졸업, 1961년 미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제학 박사 1952년 한국은행 근무, 1954년 국민대학교 교수, 1964년 서강대 교수, 1969년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위원, 재무장관, 1974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79년 대통령경제담당 특별보좌관

(11)『가격론』(남덕우),『통화관리의 통계적 모형』(김만제),『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화폐와 자본(번역)』(이승윤) 등이 소위 '서강학파'의 초기 저작들이며, 서강대 경제연구소의 첫 작품도 통화량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신고전파 이론에 기초한 화폐이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12) 이들은 국내에 미국의 최신 경제학 이론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신고전파와 케인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무엘슨(Samuelson)의 '경제학'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서강학파'가 한국의 경제학 발전에 미친 영향」, 서강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0년 5월

(13) 변형윤,「민족혁명형 개발정책에로의 전환」,『세대』1971년 12월호; 변형윤,「한국의 임금」,『경제논집』, 1964년 3월호; 변형윤,「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및 임금」,『경제논집』, 1967년 6호; 변형윤,『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 경제기사도를 생각하며』, 지식산업사, 1986

(14) 변형윤,『경제를 되새기며』, 여강출판사, 2000

(15)『중앙일보』1999년 3월 9일자. 김대환(인하대, 현 노동부장관), 전철환(충남대, 전 한국은행장) 등이 변형윤 교수의 제자이며, 김대중 정부 시기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중경회'의 김태동(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 역임), 이진순(한국개발연구원장 역임), 윤원배(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장현진(에너지 경제연구원장 역임) 등이 모두 변형윤 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16) 이병천,「다시 민족경제론을 생각한다-국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동향과 전망』제48호, 2001; 박순성, 김균,「정치경제학자 박현채와 민족경제론: 한국경제사학사의 관점에서」,『동향과 전망』제48호, 2001

(17) 박현채,「계층조화의 조건: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청산과 자주적 민족경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정경연구』1969년 11월호;「미잉여농산물원조의 경제적 귀결」,『정경연구』1970년 10월호;「제3차계획의 계획화 문제: 국민경제적 측면으로부터의 평가」,『정경연구』1971년 11월호;「경제개발 15년의 득과 실」,『신동아』, 1977년 2월호;「경제발전과 한국농업의 제문제」,『신동아』1977년 8월호;「국민경제로서의 내수산업의 육성」,『신동아』1978년 2월호;「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확대는 왜 필요한가」,『세대』1978년 9월호

(18) 변형윤과 그의 영향을 받은 전철환의 1970년대 말의 글들은 해외의존적이면서 재벌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개편없이 경제위기의 해결이 어렵다는 이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변형윤,「100억달러 수출구조와 세계경제」,『신동아』1978년 2월호; 전철환,「관주도형경제의 제문제」,『신동아』1978년 2월호

(19) 1951년부터 7년여에 걸친 그의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교관생활은 그의 경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일부 집필한 육군사관학교 교재 '정훈'에서는 그의 케인즈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

(20) 조순,「케인즈의 이론과 사상에 관한 소고」,『경제논집』1979년 18호;「케인즈와 슘페터」,『경제논집』1983년 22호.

(21) 조순,「세계경제질서의 전환과 현대경제학에 대한 반성」,『경제논집』1975년 14호

(22) 조순과 같이 서울대 경제하고가에 있었던 임원택 역시 신고전주의적으로 케인즈를 해석하였던 사무엘슨에 대한 비판이 그 초점이 되었다. 임원택,「반사뮤엘슨」,『경제논집』, 1981년 20호;「독점경제와 케인즈 경제학」,『경제논집』, 22호, 1983년

(23) 김종현은 경제사 연구에서 유럽 경제사를 많이 인용하였으며, 변형윤은 일본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였다. 박재윤은 남미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24) 홍성유,「발전이론과 농공병진정책」,『정경연구』, 1966년 9월호
(25) 박희범,「한국경제의 현단계설-로스토우의 발전단계론적 진단」,『세대』1966년 9월호; 변형윤, 「로스토우 도약이론의 한국경제에 대한 적용문제」,『경제성장의 이론과 현실』, 1969
(26) 박희범,「개발과 자본의 드라마」,『정경연구』1970년 10월호
(27) 변형윤,「민족혁명형 개발정책에로의 전환」,『정경연구』1971년 12월호; 김진균,「농촌에 있어서의 생산과 소비행위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경제논집』, 1971년 10호; 박현채,「경제발전과 한국농업의 제문제」,『신동아』1977년 8월호
(28) 조순,「자립경제체제의 정책기조」,『정경연구』1969년 12월호; 박희범,「후기 공업화 단계에 있어서의 농업정책」,『경제논집』, 1971년 10호
(29) 한국개발연구원, 1981『경제안정시책 자료집(79.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35-36쪽
(30) 조순에 의하면 이 연구는 경제과학심의회의의 발주로 시작되었으며, 1979년 말 제출되었지만, 신군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발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다. 홍원탁, 송병락, 정기준, 정운찬, 이규동, 박우희, 배무기, 박재윤, 김세원, 안승철, 박영철, 김완순, 조성환, 김병주, 김덕중, 반성환, 황일청, 나웅배, 박진근, 박성용. 이들 중에서 박영철(고려대 교수), 안승철(한국은행, 청와대 비서관), 김완순(고려대 교수), 김덕중(서강대 교수), 황일청(서강대, 한양대 교수), 박진근(연세대 교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거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경제논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31)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정경연구』에는 내자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지식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청맥』역시 매판자본론을 통해 민족자본에 기초한 내자동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32) 오경희,「차관기업체: 그 현황과 전망」,『정경연구』1968년 4월호; 김성두,「차관기업의 부실화와 대외채무의 누적」,『사상계』1969년 11월호
(33) 임종철,「외자와 한국경제개발」,『정경연구』1968년 11월호; 정도영,「외환위기와 수출 10억불의 장래」,『사상계』1969년 11월호
(34) 김정태,「질적 전환 필요한 외자도입」,『정경연구』1968년 11월호; 임종철,「개발사회의 자본」,『정경연구』1969년 6월호; 이창렬,「3차개발계획과 내자동원체제」,『정경연구』1969년 6월호; 최호진,「전환기에 선 한국경제」,『정경연구』1969년 11월호; 조용범,「고도성장의 근거를 묻는다: 외환위기하의 1970년도 정부예산안 문제점」,『사상계』1969년 10월호
(35) 박재윤,「후진국의 분배문제에 대한 접근」,『경제논집』1969년 9호
(36) 서상철,「경제발전과 소득분배」,『신동아』, 1975년 5월호; 배무기,「아델만의 한국소득분배 평등론 검토」,『경제논집』1976년 15호
(37) 임종철,「성장의 리듬」,『정경연구』1969년 11월호; 변형윤,「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및 임금」,『경제논집』, 1967년 6호; 배무기,「최저임금제의 경제적 분석」,『경제논집』, 제15호 1권, 1976년
(38) 변형윤,「한국의 임금」,『경제논집』, 1964년 3월호
(39) Gunnar Myrdal,「What is Development」,『경제논집』, 1977년 16호
(40) 김대환,「경제발전 초기 조건 및 농공 균형 발전」,『경제논집』, 1977년 16호
(41) 1950년대의 논의는 주로 사상계와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매우 초보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 시기의 논의는 미국의 재정안정계획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42) 이기준,「한국경제에 신풍을: 안정주의에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시론」,『정경연구』, 1967년 11월호; 김정태,「팽창주의의 공과: 장경제팀의 한국경제정책사적 지위」,『정경연구』1967년 11월호
(43)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1970년『신동아』(2월호)와『세대』(6월호) 는 경쟁적으로 안정기조의 정책이 필요한가를 진단하는 좌담을 싣고 있다.
(44) 이창렬의 경우 안정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KDI에 있었던 구본호는 성장이 있어야만 안정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안정과 성장 간의 대립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특집 오늘의 한국경제- 그 운동의 해명」『정경연구』1973년 8월호;「경제대담, 성장과 안정, 차병권(서울대), 구본호(KDI 연구부장)」『세대』1974년 3월호
(45) 정태성,「신혁확 경제팀 연구」,『신동아』1979년 3월호
(46) 정부는 1983년 2월 25일 수입자유화 단계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예시제에 의한 단계적 추진방안이었다. 또한 동년 11월 25일에는 수입자유화율을 80.4%에서 80.7%로, 1984년 5월 26일에는 80.7%에서 80.8%로 확대하였고, 1985년 5월 18일에는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235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47) 양수길(KDI),「수입자유화와 경제운용」,『경제논집』1984년 23호
(48) 1980년 9월 25일 경제기획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1981년 7월 24일 외국이 투자유치 확대를 위

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 1983년 12월 31일에는 외자도입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49) 김광석(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의 경제계획과 경제발전」, 『경제논집』, 제20호, 1981년

(50) 남덕우 외,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 : 20주기 추모 기념집』 참조.

(51) 『정경연구』 1969년 12월호

(52) 이창렬, 「경제상식선의 오류에 대한 비판」, 『정경연구』 1972년 4월호; 이현재, 「케인즈에서 프리드만에 이르는 화폐이론의 전개」, 『경제논집』 1974년 13호; 박재윤, 「Demand for Money in an underdeveloped economy」, 『경제논집』 1975년 14호; 강광하, 「프리드만의 인플레이션 이론」, 『경제논집』 1975년 14호; 박재윤, 「저개발경제의 화폐수요」, 『경제논집』 1976년 15호

(53) 윤창호, 「An Essay on Financial Liberalization」, 『경제논집』 1980년 제19호

(54) 이승윤,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선택을 중심으로」, 『정경연구』 1969년 6월호

(55) 김병국, 「외자도입의 현황, 문제점 및 전망」, 『정경연구』 1970년 4월호

(56) 차병권, 「재정학의 이론적 발전과 연구동향」, 『경제논집』 1981년 제20호. 이 글에서1960년대에 나온 애로우(K.J. Arrow)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재정학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었던 부캐넌(J.M. Bucannan)과 와그너(R.E. Wagner)의 책(1977)은 1981년에 번역되었다.

(57) 김두희, 「경제개발과 재정정책」, 『경제논집』 제15호 1권, 1976년

(58) 임원택, 「프리드만의 화폐이론」, 『경제논집』, 제25호 1986; 이지순, 「화폐경제이론의 최근 동향」, 『경제논집』 제25호 1986; 정운찬, 「화폐경제학사 서설」, 『경제논집』 제26호 1987

(59) 박우희, 「수입자유화 이후의 한국경제」, 『신동아』 1978년 6월호

(60) 조순, 「경제발전의 금융적 조건과 한국 금융의 과제」, 『경제논집』 1982년 21호

(61) 정운찬, 「전환기에 선 한국금융의 진로」, 『경제논집』 1982년 21호

(62) 이정우, 「라이욘후푸드의 케인즈 경제학 재해석의 의의와 한계」, 『경제논집』 1976년 15호; 김두희, 「케인즈의 경제사상」, 『경제논집』 1977년 16호; 이정우, 「케인즈 경제학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의의에 대하여」, 『경제논집』 1977년 16호; 김두희, 「케인즈의 이자이론」, 『경제논집』 1978년 17호. 임원택은 사무엘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비판하였다. 임원택, 「반사뮤엘슨」, 『경제논집』 1981년 20호

(63) 조순, 「세계경제질서의 전환과 현대경제학에 대한 반성」, 『경제논집』, 1975년 14호

(64) 조순, 「케인즈의 이론과 사상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1979년 18호

(65) 경제논집 22호에 실린 케인즈 특집은 다음과 같다. 임원택, 「독점경제와 케인즈 경제학」; 엄영석, 「후케인즈파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수행, 「케인즈의 사회사상과 금일의 불황」; 조순, 「케인즈와 슘페터」

(66) 김용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8.3조치까지; 박정희 신화의 숨은 주역 경제참모들의 극비작전」, 『신동아』 2002년 3월호

(67) 이기준, 『일학일생』, 일조각, 1990, 60-61쪽

(68) 『경제안정화시책 자료집』 64쪽.

(69)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iv 쪽

(70) 『중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47-49쪽. 『경제안정화시책 자료집』에서도 재벌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정책 금융 등의 혜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71) 『경제안정화시책 자료집』 72-80쪽

(72) 조순은 1970년 이후 경제정책의 결정이 일정한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대체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실적'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경제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무시되었다고 회고하였다.

(73) 『조선일보』 1979년 8월 16일자

(74) IMF 협의단의 보고서는 『조선일보』의 1980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자까지 연재되어 있다.

(75) 본고의 작성과정에서 조순 교수와 정운찬 총장으로부터 자료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앞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논의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관료, 학자들의 증언 작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